잦은 고장·잇단 사고·안전 불감···광주 지하철이 불안하다



1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당사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세월호' 추가 협상 불발

새정치 의총, 재협상 결의··· 새누리 "수용 불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 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새정 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하기로 결의 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 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30 분에 걸쳐 진행된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 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단 가시 적 성과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여야는 12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절충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월호 특별 법 합의가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전혀 결론 난 게 없는가"라는 질 문에 "네 오늘은….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며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 표도 "협상이 다 안 끝났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중"이라고만 했다.

협상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양보했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되 유가족과 야당의 의견 반영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간에 논의가 끝난 사 안이고,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 제 와서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oiri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애초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청문회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증인 협상을 특검 문제 등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 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참석 의원 대부분이 재협상 등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재협상을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이 박 원대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협상 주장이 압도적이 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는 특검보다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진상조사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통 10년' 광주지하철 문제점

역 관리·운영 등 개인에 위탁 수익성 위해 안전은 외면 사고 발생시 대처 엄두 못내

'서민의 발'인 광주지하철이 불안하다.

개통 10년째인 올해에만 두 차례나 전동차 사고 가 발생했다. 여기에 각 역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가 빈번하다. 하지만 예산절감 등을 명분으로 각 역의 관리·운영을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이 결여된 개인에게 위탁하다보니 역무원 확충 등 '돈 들어가는 일'은 일단 뒷전이다. 사고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고 끊이지 않는 광주지하철=지난 2008년 4월 28일 첫 운행을 시작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은 운행 횟수만 90만회에 달한다. 하루 평균 250회 안팎이 운행됐으며, 이용객도 평균 5만여명에 이른다. 매일 5만여명의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애인 형제가 지하철을 탔다가 형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응급조치가 제대로 안 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 은 지하철 역내의 사고도 많다는 게 지하철 노조의 주장이다.

김정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철도공

사 지회장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크 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는 역을 중심으로 승객의 생 명과 직결되는 철로로 뛰어드는 안전사고만 연평균 4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또 "에스컬레이터 이용 도중 넘어지는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이 각 역마다 월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구연한이 25년인 전동차도 운행 10년이 넘어서면서고장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들어 전동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는 안전사고만 2차례나 발생했다. 지난2005년 이후 9년동안 차량 고장에 따른 전동차 지연(10분 이상)은 2건뿐이었다.

◇위탁 역장제 폐해=지하철 노조측은 각 역마다 근무인원이 3명에 불과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승객안전까지 책임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최소 인원 시스템은 위탁 역장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위탁역장은 광주도시철도공 사로부터 1개 역당 연평균 3억1000만원의 도급비 (운영비)를 받고 직원 인건비, 승차권 발매, 승객안 전 책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운영비를 최대한 아껴야만 자신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하고, 최소인원만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역에는 3명이 1개조로 배치돼 있으며, 이 중 1명이 연차휴가를 내고 점심시간 등이 겹칠 경우는 1명이 검표부터 CCTV 설비 감시, 안전사고 예방 등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사실상 전동

차가 진입하더라도 승강장을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8개 역의 경우 승강장을 지키는 안전요원의 배치가 중요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위탁역장의 비전문성도 문제다. 위탁역장 12명 중 6명은 광주시 등 퇴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 간기업체 출신 4명 등 대부분이 지하철과는 무관한 비전문가다.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개통 10년을 맞이한 지하철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운영방식인 위탁역장제부터 각 역사와 전동차의 안전 시스템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인 지하철 역무원 1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역이 위탁역장의 취미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도 고쳐야할 대목이다. 시민이 오가는 역내통로에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조잡한 화폐 등을 펼쳐놓고 있는 탓에 사고시 대피로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도 요구된다. 상무역 등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면서 시민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문화도시 광주답게 안전시스템 확충과 함께 각 지하철 역사를 하나의 문화작품으로 만드는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 대통령, 세월호법 8월 중 처리 요구

각계, 여야 합의안 철회·재협상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 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야 합의안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날도 잇따르면서 정국에 긴 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 의에서 "지난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처 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 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 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 하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 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할때"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 로 규정하고 "양당의 합의를 파기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가족들 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화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등 원로 5인은 박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상결과에 대한 자잘한 시비에 얽매이기보다시대의 큰 흐름을 보고 합의 내용을 재고해달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